

# 文-트럼프, 비핵화 협상·3차 남북회담 등 의견 교환

文 대통령, 트럼프와 18번째 통화  
한미 긴밀한 협의·공조 지속키로  
UN총회서 한반도문제 협의 검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한걸음 더 앞당기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고위급의  
평양 추가 방문이 모두 9월안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이달 중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  
담을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기점으  
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관  
계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서면브  
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  
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

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이며, 지난 6·12 싱가  
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84일 만이다.

올해 유엔총회는 우리의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말 뉴욕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  
되는 문 대통령이 북에서 받은 '선물'을  
갖고 뉴욕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그림  
이 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  
상 만남'에 대해서는 "주진 중인 사안"이  
라고 만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  
절단은 친서를 들고 이날 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특사단을 대표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  
가안보실장은 출발 전날 춘추관에서 가  
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  
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  
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  
문집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  
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  
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  
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전 9시 평양 국제비  
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  
화통일위원장과 통전부 관계자들의 영접  
을 받았다"며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수석은 또 "특사단은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  
간 환담을 했다"며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석을 했고, (리 위원장과) 미팅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무산된 마이크 폼  
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재추진 가  
능성도 점쳐졌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북  
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여야協治시대 열리나… 매달 초월회 개최

###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오찬회동

"개헌·정치개혁 문제 두루 토론  
예산안 심의 앞서 협치의 계기"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최근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  
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  
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  
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  
과 만나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며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  
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자고 했다"며  
"(오늘은) 개헌, 정치개혁, 선거구, 판문  
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두루두  
루 얘기했다"고 전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재진에게 "저  
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  
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  
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까지 묶어  
서 비준동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찬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문 의  
장은 모두발언에서 "초청에 응해주신 5당  
대표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야 5당 대표 모임) 정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시대는 국민 뜻과 시대정  
신이 어우러지는 시대로, 우리 민족이 도  
약할 현재일우의 기회가 다시 있을까 싶  
은 시대적 소명을 여러 군데서 얘기했다"  
며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시대적 소명을  
갖고 같이 하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  
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에 곧 제출되면 심의해야하는데, 심의에



문화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앞서 5당 대표를 모아 협치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의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회의를)  
정례화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며 "선거법 개정이나 개헌이라든가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안도 이 자리에  
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안이 대  
단히 많고 급속히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서로 현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노력해  
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이  
청와대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뤄지고 청  
와대 정부라는 말을 듣는데, 한 곳으로 집  
중해선 나라가 돌아갈 수 없고 정책이 제  
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래서 개헌을 요구하고 선  
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국정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고 희망했다.

정동영 대표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  
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갈 때는 잘 보이는 법  
이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 모이신 지도  
자들은 어찌찌 내려갈 때를 준비해야 하  
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비유했다.  
정 대표는 "올라갈 때 못 봤던 것들을

잘 헤아려서 주권자인 국민들 뜻을 잘 받  
들어야 한다"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는  
말씀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이 자기들  
이 뽑은 국회의원을 폐싱하고 청와대 청  
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의할  
사람들이 대의하지 못하는 불신은 선거  
제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 대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정  
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위원 명단을  
빨리 확정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 개헌 문제도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해찬 대표, 김병준 위원장, 정동영 대표  
등과 손발을 맞췄던 문 의장은 회동 전 환  
담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손 대표도 "문 의장은 제가 대학 때부터  
존경하는 선배"라며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규제개혁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을 뵙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으  
로서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도 했다"고 언  
급했다.

50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이정  
미 대표는 "저는 어디 가서 올드하다는 얘  
기를 듣기에는 (젊다)"며 "올드보이가 아  
니라 골드보이로서 협치를 잘 만들어보자"  
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연합뉴스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내정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  
관에 최강욱(50·사진)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  
화에서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감  
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공직기강비서관직에 최 변호사가 내  
정돼 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최 내정자는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  
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  
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  
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  
내장자는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 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내장을 맡았다. 국방부 '국  
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도 활동했다.



법위원장 등을 지  
냈다.

2012년부터 올  
해까지 방송문화진  
흥회 이사로 활동  
했고, KBS에서 최  
근까지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  
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고  
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  
한다.

/연합뉴스

## “韓경제 위기 아냐… 적정한 성장 하고 있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  
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  
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성장  
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달성을 정도로 좋  
다"며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  
했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면서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  
다.

장 실장은 "지난달 취업자가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과거에는 20  
만명, 안 좋을 때도 10만명을 기록했던 수  
치"라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  
다"고 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  
한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를 따진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아니다"라며 "분모(생산 가능 인구)  
가 급격하게 줄면서 취업자의 절대 수는 줄  
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현상도 있  
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중심 성장 정책을 펼쳤지  
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얘기하  
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 주택  
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